

통일독일의 도서관 통합과정

노 문 자

(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수)

目 次

- 1. 서 론
- 2. 도서관의 통합과정과 그 대책
 - 2.1 AG 1. 공공도서관
 - 2.2 AG 2. 도서관 직원과 교육
 - 2.3 AG 3. 학술도서관 자료제공서비스
 - 2.4 AG 4. 지역·전국적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중앙기구
 - 2.5 AG 5. 도서관시설의 현대화와 정보기술
 - 2.6 AG 6. 도서관의 구조와 법적문제

3. 결 론 인용문헌

1. 서 론

통일된 독일 도서관계가 과거의 동독도서관을 선진국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있다. 이러한 노력을 미리 고찰하는것은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모델을 접하는 기회가 될것이다. 특히 독일이 통일 후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행착오의 단계를 단축시켜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전후 동서독 도서관 관계자(전문가)와 연방정부, 주정부 관계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 통합 문제에 접근했는가를 가능한 한 상세히 알아보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먼저 독일도서

관과 우리의도서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큰 차이를 알게된다.

첫째 우리의 현대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동서독은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고, 두번째는 동서독은 그들이 분단되기 이전에 도서관의 제반 하부구조를 공동으로 구축한 점이다. 이점은 독일이 통일 후 도서관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비해 그들의 문화정서가 비슷함을 의미한다.

독일은 통일 후 그들의 도서관 환경을 르네상스적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단계로 해석하는것 처럼 보여진다. 즉 과거 이룩했던 도서관전반의 기초위에 다시 태어나는 동기를 부여받아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것이다. 독일 통일이 흔히 경제통일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서독에로의 흡수통일 즉 경제력에 기반을 둔 통일이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도 서독도서관의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서독도서관 시스템으로 편향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도서관 통합과정과 그 대책

헌법상의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 1990년 초 서독의 연방정부, 주정부의 교육학문성장관(Bildungs-und erziehungsminister)과 동독의 해당장관들은 통일 후 독일의 교육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공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Bildungskommission)를 발족시켰다. 이 교육위원회의 도서관분야에서는 도서관 전문가그룹(Expertengruppe für Bibliothekswesen)

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관전문가그룹의 회원들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동독도서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의 아르바이트그룹(Arbeitsgruppe, 이하 AG)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에서는 각 해당 분야별로 간단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AG는 먼저 1991년까지 그들의 작업을 끝냈지만 1년 더 연장하여 1992년 11월 8번의 회의를 끝으로 라이프찌히에서 막을 내렸다.

1990년 6월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AG)에는 29명의 도서관 전문가가 참가했다, 이 중에 11명은 동독대표였다. 회의는 교육학문성의 대표를 회장으로 시작되었고, 이 회의의 회장은 동서독 대표들이 순번대로 교체되었다. 이 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간단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동독도서관의 법적인 보장
- 단기간의 보조프로그램과 장기적 도서관 구조 조정
- 기본장서의 개발
- 도서관 예산모델, 도서관 기준과 표준치의 발전안
- 도서관 건축과 유지보수의 보조프로그램
- 사서, 정보전문가교육의 새 개정안
- 공공도서관의 존재의식의 필요성과 발전안
- 지역적,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협력

위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단, 중장기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하고 시행에 옮기기위해 AG는 다시 위에 언급된 6개의 AG를 결성했으며 각각의 AG에는 외부의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6개의 AG는

- AG 1. 공공도서관
- AG 2. 도서관 직원과 교육
- AG 3. 학술도서관과 자료제공서비스
- AG 4. 지역적, 전국적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중앙기구
- AG 6. 도서관 조직과 법적문제

이 6개의 AG들이 다시 각 해당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연방정부에서는 첫번째 즉 석보조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동독의 대학생들의 학업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기본적인 학술서적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는 15 Mio DM(약 75억)을 출자했다. 이 작업은 베를린의 독일도서관연구소(Deutsche Bibliotheksinstitut, 이하 DBI)의 주관하에 집행 되었으며, 후에는 해당 AG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떤분야의 어떤 도서를 선정하여 어느 도서관에 배당하는가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동안에 AG는 2번째의 회의 후에 벌써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1990년 10월에는 동독도서관을 위한 단축권고안이 나오고, 그 후부터는 각 소단위의 AG에서 분야별 권고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1. AG 1.공공도서관

동독의 공공도서관(Allgemeinbildende Bucherei)은 원역하면 “전인교육의 장”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공도서관은 러시아혁명 후 만인평등, 자본주의와의 투쟁, 문맹에 대한 처방으로서 소련 공공도서관(Massovaja biblioteka)의 모델에 기초한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적 문화를 확장시키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독서운동과 교육(학습)운동의 중요한 모토(motor)로서 모든 동구권 나라에 확산됐다. 동독은 그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파트너로서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노조도서관의 설립목적의 의식은 투철하였고 그 성과 역시 대단했다.

특히 노조도서관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장에서 도서대출을 가능하게 까지 했다. 그들의 장서는 ① 학문적, 기술적혁명 ② 평등한 사회주의적 교육시스템 ③ 사회주의적 문화혁명의 지속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통속소설 ④ 막스레닌니즘의 자료들로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40년이상 지낸 동독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회, 정치 등의 주변환경의 변화는 더더욱 탈이데올로기적인 순수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학술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공공도서

관의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그리하여 학술도서관에 관한 권고안은 통일 후 몇달 사이에 이미 2개나 나왔다.

AG 1은 동독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준을 서독의 독일도서관회의에서 제출한 도서관계획73(Bibliotheksplan '73)과 1964년 교육학문성의 지원으로 독일도서관협회에서 간행한 지방행정합리화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이 두권의 저서는 오래된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독공공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침서이다.

1991년 가을, 통일 일년 후 교육학문성은 도서관계획 '73 3000부를 동독의 공공도서관과 주정부, 시와 다른 하위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주무부서에 보냈다. 바로 몇달 전에 도서관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한 새로운 안을 독일도서관회의에서 토론했다. 그들은 이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도서관계획 2000”을 준비중에 있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형 인간양성과 관련된 장서들이 도서관의 서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고, 통일 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도서관에는 새로운 장서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도 점차 자동화되어가고있다. 그 결과 동독공공도서관은 과거 잘 조직화된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AG 1은 1991년 11월 공공도서관의 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Arbeitsvorgänge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Beschluss und Bewertung von bibliothekarische Arbeitsplätzen”을 간행했다. 이 간행물은 결과적으로 동독공공도서관 뿐만아니라 전 독일공공도서관의 업무지침서가 되었다.이 외에도 공공도서관의 건축에 관한 단행본등 공공도서관에 관한 출판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1991년 연방정부는 900 Mio DM(약 4500억)을 문화진흥촉진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그 중 600 Mio DM은 유럽수준의 문화유산 보존, 시설, 연구발표 등의 예산으로 책정됐고, 300 Mio DM은 동독문화정책의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해 책정되었다. 동독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 개선프로그램

은 이 300 Mio DM에 포함되었으며, 이 예산은 1992년에는 200 Mio DM으로 삭감되었다.

AG1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도서관 전문가들의 결의안을 보내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그들 작업의 지속성을 알리고 있다. 동독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 개선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서구성과 장서구입을 위한 재원확보
- 건축과 개축방안
- 자동차문고
-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위한 정보자료
- 계속교육프로그램

2.1.1. 공공도서관 구조

서독공공도서관은 매우 엄격한 지방자치제중심 체제하에 분산식시스템을 유지하고있는 반면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일관된 계획경제정책하에서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발전, 관리되어왔다. 통일 전후 동독공공도서관은 갑자기 재정지원을 책임지는 정부의 부채상태에서 혼란기를 맞았다. 이 혼란기동안 과거의 노조도서관, 소규모 공공도서관, 기업의 자료실들의 자료는 극히 일부만이 타도서관으로 이관됐고 그 외의 자료들은 팔리거나 기증 또는 폐기처분되었다. 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실시되는 사서들도 생겨났으나 지금은 서독의 지방자치체에 융화되어가고있다. AG 1은 새로운 지방자치체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해정체제로의 정립
- 혼란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규정
- 지역적, 전국적 구조
- 새로운 주정부 헌법에 도서관을 각 주의 의무조항으로 삼입, 촉진
- 중앙집권식 예산책정을 주정부의 시와 다른 하위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위임

위의 사업을 위해 두개의 권고안들이 발표되었다. 이 권고안들은 주정부대표, 문화성의회 대표의 의견들과 함께 동독의 각 주정부의 문화성장관, 각시의 회의회원, 하위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공무원, 공공

도서관관장에게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중 첫번째 권고안은 공공도서관 장서의 기준과 표준치, 예산, 건물, 업무, 직원에 관한 프로필을 내용으로 하고있고, 두번째 권고안은 주정부의 법에 공공도서관의 설립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 이외에 주정부는 주정부 예산으로 각 시마다 전문공공도서관센터(Offentliche Fachzentrale)를 설립토록 규정짓고 있다. 또한 이 권고안은 자동차문고의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여 이미 30개를 가능케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들은 시행상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인정해야만 했다.

- 공공도서관의 폐쇄
- 40%의 장서가 폐기처분
- 주정부의 예산빈곤
- 비용·효과·서비스 면에서 본 경직된 인사관리

2.1.2. 직원문제

동독공공도서관 사서들이 현재 그들의 실무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으로 배속된 직원과 정년퇴임 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던 직원들의 해고
- 공공도서관 폐쇄로 인해 발생한 해고
- 각 부서의 변화
- 예산의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에 따른 지속적인 직원의 해고

다른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AG1은 동독의 사서들의 급여수준을 서독의 일반공무원의 급여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 결과 “Bibliotheks-fachliche Stellungnahme zur Anpassungen der Vergütungsstruktur des BAT für Angestellten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des neuen Bundeslander”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서는 동독의 임금체계는 약간의 수정과 함께 서독에서 받아들여지되 동독사서의 임금은 서독사서 임금의 60%로 책정되었다(1992.12월 까지).

2.1.3. 기타문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AG 1은 이 문제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구상했다. 기존의 장서에서 순수문학작품과 어린이도서는 각 10%씩, 일반도서와 전문도서는 각 15%씩 교체시킴으로서 1992년 말까지는 40% 이상의 장서변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동독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특히 경제, 컴퓨터 기술, 법률, 기행문, 카운셀링, 현대미래학, 통속소설, 코믹, 시청각자료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위한 이러한 장서개발은 연방정부의 보조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 상당한 부분이 서독의 각 파트너 도서관끼리 기증을 통해 진전을 보았다. 이 외에도 장서개발은 자발적인 국민운동의 일환인 “독서재단”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기증을 통해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서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KZ(Einkaufs-zentrale für Öffentliche Bibliothek)은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다. 이 EKZ는 통일 직후 동독의 공공도서관의 전반사항을 관리통제해왔던 도서관중앙연구소(Zentrals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 ZIB)와 밀접한 협동관계를 이루어 왔으나 현재 ZIB는 서독 백림의 독일도서관연구소(DBI, Deutsche Bibliotheksinstitut)로 통합되면서 이 DBI와 협동하여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서독 도서관전문가들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거론된 주요 주제의 하나는 (부분적인)민주주의 교육의 원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자유로운 학교도서관의 건립이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서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했다. AG 1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설립을 문화정책의 기초적인 사업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도서관연구소의 학교도서관 전문가그룹은 “Empfehlungen zur Aufbau eines Schulbibliothekssystems unter Beachtung der 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ander, 1992”와 “Schule und Bibliothek. Empfehlungen für

Trager von Schule öffentlicher Bibliotheken” 두 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동독의 주거지역, 쇼핑센터 또는 학교건물에 소규모의 분산식 이동도서관의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서들은 학교와 도서관의 인원감축에서 발생하는 경쟁심리 때문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의 도서관 건립계획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다. 서독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서독에서조차도 아주 이상적으로 여겨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창한 계획들을 동독도서관에 접목시키는 것은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AG 1의 사업들이 연구 진행되는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동서독이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있었다. 동독은 공공도서관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던 반면에 서독은 universaland academic library에 비중을 두었다.
- 동서독은 각기 그들 도서관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했으며, 또한 서로 각자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경쟁심리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 변화된 상황에서 동독은 옛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서독의 시스템에 융화하려는 노력을 했고, 또한 그 주장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통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주변상황은 결국 동독의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차 서독의 시스템에 따라야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2. AG.2.도서관 직원과 교육

6개의 아르바이트그룹의 사업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마인 이 문제는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이 AG 2는 동서독 도서관 동료들의 경험과 서로 다른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양측이 모두 도서관, 정보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시일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 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1991년 1월

“Empfehlungen zur Gleichstellung bibliothekarischen und dokumentarischen Berufsabschlüsse aus ehemaligen DDR und zur Aquivalenz von Berufsverzeichnung”에 내놓았다. 이 안은 동독도서관사서, 정보교육과정과 직업교육의 상황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조사된 것이다. 이 안에는 동독의 사서, 정보전문가(도큐멘타,인포마토)들의 자격을 인정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과 서독의 자격증과는 다르게 명칭되고 있는 동독의 자격증을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되어 지도록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안이 제시되었다.

동서독의 사서, 정보전문가의 명칭은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 최근 라이프찌히(Leipzig)의 사서교육기관에는 박물관 관련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주의를 끌고있고, 또한 Stuttgart의 도서관학교에는 음악전문사서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사서교육도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전문가 양성기관도 사서의 명칭이 다양하듯이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다. AG 2에서는동독의 사서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동독의 명칭을 서독의 명칭으로 하는 통일안을 준비했다.

통일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규정과 사서의 명칭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또다른 과제는 동독 사서교육기관의 정리였다. 이 정리작업은 최근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럽공동체, 즉 유럽사서의 배출과도 연계된다는 입장에서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작업을 위해 AG 2는 서독의 각 도서관 유형의 사서전문가협회의 교육문제 책임자들과 독일사서정보전문가 기관장회의, 독일사서협회의 교육위원회와 협력관계에 있다.

2.3. AG.3.학술도서관 자료제공서비스

AG 3의 구성원은 교육학문성의 담당자, 동서독의 사서, 서독의 도서관연구소와 동독의 학술도서관을 관장하고있는 Methodische Zentrum의 대표들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도서관의 원활한 자료제공을 위해 처음부터 매우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AG 3은 연방정부의 학문협회의 업

무와 중복되어 미묘한 관계에 처했었으나 AG 3의 연구결과는 학문협회의가 통일 후 처리했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 AG.3의 과제는 미래 동독의 대학발전을 위해 도서관 하부구조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고 또한 단기간에 동독도서관의 예산을 서독의 수준으로 올려 지금까지 외환부족으로 입수하지 못했던 선진 서방세계의 학술서적을 구입하는 일이다.

2.3.1. 기본장서 구입 프로젝트(1989)

AG 3은 먼저 기본장서의 구입을 위해 연방정부의 교육학문성으로부터 책정된 45억원의 예산을 집행시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독대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자주 사용되는 기본장서를 구입하기위해서 조달된것이다. 이 예산의 집행을 위해 전문가들은 기준안을 만들었다. 그들은 먼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생당 약 70,000원을 도서구입비로 정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일이었다. 통일 직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동독대학교도서관은 그들의 자료선정을 위해 서독 사서의 자문을 받는것이 일반화 되었었지만 AG 3은 점차로 동독도서관 사서가 스스로 자료선정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단 서독 사서들은 서방세계의 자료선정에 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성있는 자료 선정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지정도서인 경우에는 여러 대학의 각 분야별 표준도서리스트를 제공하므로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이러한 작업은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주도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동독 대학도서관들도 현재는 어느 정도 각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회복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동독대학의 발전을 위해 Volkswagen재단은 50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이 재단은 독일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이전 1987년부터 동서독의 협동체를 통해 동독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대한 정보에 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 후 바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보조지원활동을 구체화 시켰다.

동독의 학술도서관이 서독의 학술도서관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예산지원 기간을 정부측에서는 10년으로 예측했으나 전문가들이 제출한 권고안에는 12년으로 되어있다.

2.3.2.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y)

지역적, 전국적인 자료제공체계는 특출한 어느 몇 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다. AG 4는 학술연구를 위한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보조프로그램, 중·장기 계획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독에는 서독에서처럼 정확하게 비교 될 만한 지역도서관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주립도서관(Landesbibliothek)이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믿고있다.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 지역(Land)의 자료에 대한 남본체를 책임지고
- 해당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며
- 지역서지(Regionale Bibliographie)를 발간하며
- 해당지역의 종합목록센타로서의 기능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도서관협동센타의 기능도 수행하며
- 상호대차에서의 조정도서관(Leitbibliothek)역할을 하며
- 전문가 계속교육을 조직 관리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AG마다 권고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동안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는 과거 독일의 장서를 되찾는 운동이었다. 이 사업은 동유럽 도서관과의 협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50억원을 책정하였다.

2.4. AG 4.지역·전국적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중앙기구

AG 4의 구체적인 사업안은 아래와 같다.

- 이상적인 상호대차
- 도서관 협동체제의 구축
- 기술적인 네트워크
- 표준과 기준

- 중앙기구

2.4.1. 이상적인 상호대차

동독에서 충족되지 않은 동독이용자의 자료요구는 서독의 파트너지역의 종합목록센터에서 해결된다. AG 4는 동독의 도서관이 새로운 상호대차의 파트너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상호대차추진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동독도서관이 어느정도 자료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까지 유효한 임시상호대차규정을 새로 고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날로 발전하는 정보기술도 감안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AG 4는 신속한 상호대차를 위해 축차간행물 서지지구와 종합목록을 빠른 시일 내에 CD-ROM에 수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외부 데이터베이스(CD-ROM)의 구입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다. 그 결과 동서독 축차간행물 데이터베이스는 1993년 말 완성 예정이다. 또 신속한 상호대차를 위해 자동차서비스를 더욱 더 장려하였다.

2.4.2. 협동체계의 구축

AG 4의 사업 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가 협동체계의 구축 사업이었다. 협동체를 위한 1990년 동독의 상황은 사실상 몇가지 지역적인 경험을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한 편이었다. 협동체의 구축을 위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만들어져야 했다.

- 자료의 제공과 서지정보의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 각 도서관은 이용자와 서비스의 비율에 적합한 현실성있는 도서관 규모를 재정립하여야 하며
- 이용자 서비스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 결과 발표된 권고안의 구체적 사항은
- 동독의 도서관은 서독의 협동네트워크와 협력해야 한다.
- 이 협력체는 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재원조달은 일시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감안해야 하며
- 공동의 약정이나 표준은 지켜져야 한다.

AG 4는 위 구제안의 실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용모델, 비용추정안을 내놓았고 이외에도 행정상의 협약이나 지역간의 협약을 위한 표준조약서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작업의 결과 독일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4개의 협력체가 탄생했다.

- Sudwestverbund und Sachsischer Bibliotheksverbund

- Nieder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

- Norddeutscher Bibliotheksverbund Bremen, Hamburg, Mecklenburg-Vorpommern, Schleswig-Holstein

- Berlin-Brandenburg

2.4.3. 네트워크

여기서 언급되는 네트워크는 먼저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연결하는 학술네트워크(WIN, Wissenschaftsnetz)에 지역의 도서관망(Lokale Bibliotheksnetz)이 가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도서관망은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지방단위(lokal)시스템, 지역(regional)시스템, 전국적(uberregional)협동시스템과 연결되어 결국은 하나의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Modell을 지향하고 있다. 이 OSI모델은 도서관 분야에서 SR(Search and Retrieval)와 ILL(Interlibrary Loan)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는

- 최종이용자에 자료제공서비스의 개선효과
- 정보탐색, 서지정보, 자료청구, 대출까지도 연결
-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통해 자료의 수서와 편목업무를 해결

2.4.4. 중앙기구

전문가그룹이 구성되면서 부터 동서독의 중앙기구의 통폐합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서독 중앙기구의 통폐합에 있어서 AG는 최대한으로 기존의 현실을 감안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동독의 Methodische Zentrum과 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은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DBI)로 통, 폐합되었다.

동독의 국립도서관이었던 독일도서관(Deutsche Bucherei, Leipzig)은 서독의 국립도서관인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Frankfurt)으로 합병되었으나 동독의 건물은 계속 유지되면서 업무의 재조정이 있었다. 자료의 보존과 이용은 계속 두 국립도서관에서 과거와 같이 수행되지만 아래와 같이 업무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

- Frankfurt 독일도서관 : 국가서지의 발간과 배포.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 독일 망명아카이브의 유지
- Leipzig의 독일도서관 : 도서수집의 중앙센터, 독일도서와 활자박물관, 여러가지 특수장서수집.

이러한 업무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은 Frankfurt의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현재의 건물이 개축을 필요로 한 상태이어서 통일 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파리의 국립도서관처럼 세계적인 도서관을 건축할 예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도서관 관련 중앙기구로서 빼놓을 수 없는 독일학술지흥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과 독일도서관연구소는 특히 통일작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5. AG 5.도서관시설의 현대화와 정보기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외부의 현장전문가 1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독일의 분산식 도서관시스템을 감안하여 먼저 19개의 학술도서관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PC를 보급하고 직원의 교육에 들어갔다. 이 19의 학술도서관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4내지 5개의 주단위로 분산되어 주단위의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게된다. 기술적으로는 PC-Network를 기반으로 타지역의 정보센터, 더 나아가서는 서독의 지역종합목록센터의 파트너 구실을 하게된다.

이용자의 자료이용서비스를 위해서 PC를 보급받은 도서관은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CD-ROM로 대체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서독의 여러 도서관에서 CD-ROM망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2.6. AG 6.도서관의 구조와 법적문제

이 전문가그룹은 州 議員인 법률가를 자문역으로 그들의 연구에 참여시켰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법은 서독에서는 주정부의 대학지원기준에,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은 그 규모에 따라 주정부 산하 시와 하위 지방자치 단위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령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 관련 법으로는 납본법, 국립도서관법, 독일도서관연구소법 등이 있다. 서독의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법은 행정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동독에서의 도서관법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식의 (가상)법규로 매우 포괄적이다. AG의 과제는 헌법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그들의 도서관법을 서독의 도서관법에 동등하게 융화시키는 작업이다. AG 6은 이 사안과 관련해 동독도서관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안건들을 제시하는 기회를 주었으나 동독사서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동서독 간의 헌법상의 기초작업이 끝날때까지 동독도서관은 과거 그들의 도서관 관련 법조항을 적용시켰다.

도서관 실무에 관한 법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 납본법
- 사용료
- 도서관의 재정 보장대한 책임 등이 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독일학술진흥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은 주로 학술도서관 위주에서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주립도서관과 전문특수도서관들은 이러한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AG 6은 독일이 지향하고있는 분산식 도서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한 지역단위 도서관의 역할이 중대함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 두 유형의 도서관이 도서관 발전계획에 배려되도록 역설했다.

3. 결 론

거의 반세기의 분단상황에서 다시 재결합한 통일독일의 도서관계는 동독의 도서관을 서독의 수준으

로 끌어 올리기 위해 대규모 재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대한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교육학문성은 먼저 동서독 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교육위원회는 도서관분야의 연구를 위해 도서관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관전문가그룹은 다시 6개의 소그룹을 조직했다. 이 6개의 소그룹은 그들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권고안들을 내놓았다.

수많은 권고안들을 통해 동독의 도서관을 유럽 수준, 국제수준의 도서관으로 끌어 올리는데 그들은 노력하고있다. 학술분야에서는 학술자료의 제공에 신속을 기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고,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의 이념에 젖어있던 동독주민들을 획일성에서 벗어나

게 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인격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념서가를 헐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장서개발을 하고있다.

도서관전문가들은 동독도서관의 재정비 작업에서 가능한한 과거 동독의 도서관문화와 정서를 살리면서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에 조화시킨다는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는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으로 통폐합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독의 도서관계는 동독도서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지금까지 낙후한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문화적 통일은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우리는 위의 예에서 배우고 있다.

인 용 문 헌

- Bibliotheksplan '73. 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Deutsche Bibliothekskonferenz. 1973
- Bund-Lä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Empfehlungen zur Förderung der 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Berlin 1991. (DBI-Materialien,106)
- Bund-Lä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Abschlussbericht 1990-1992. Empfehlungen und Materialien. Berlin. 1993. (DBI-Materialien,126)
- EDV-gestützte Bibliotheksdienstleistungen.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Berlin. 1991. (DBI-Materialien, 110)
- Die Ausstattung von Hochschulbibliotheken mit lokalen Bibliotheken in HBFV-Verfahren.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39 Jg. H.4. p.279-314.
- Griebel,Rolf: Etatsituation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swes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0.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Jg.38.H.1. p.3-35.
- Griebel,Rolf: Etatsituation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in Deutschland. ZfBB. Jg. 39. H. 6. p. 484-524
- Rechtsvorschriften für die Bibliotheksarbeit.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Berlin. 1992. (DBI-Materialien, 117
- Solte, E.L.: Bibliothekspolitik im Bundesstaat. ZfBB. Jg.38. H.5. p.425-436